

석유제품 가격담합 “미국도 심각”

82%만 가동하며 고수익 향유 ... 석유제품 강세로 소비행태도 변화

국제유가 강세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석유기업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클레어 맥카스킬(미주리주)을 비롯한 상원의원들은 5월17일(현지시각) 국제유가 급등 속에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요구했다.

석유기업의 이윤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설비의 약 82%만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82%는 에너지 수요가 연중 최고로 치솟는 여름 시즌 이전의 가동률로는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석유 판매상들과 분석가들은 정유기업들의 낮은 가동률은 불황과 높은 실업률, 에탄올(Ethanol) 사용 증가에 따른 가솔린 수요 감소 등의 결과로 보고 있다.

또 석유기업들의 높은 이윤은 아칸소, 캔자스,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중부지역에서 과잉공급되는 값싼 원유를 쓰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담합 주장에 대해 “대형 석유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고유가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석유화학·석유기업연합 찰스 드레브나 회장은 “수년간 석유제품 가격 조작에 대한 수십건의 조사가 있었지만 신문 머리기사와 정치적 과장법을 이끌어내는데 그쳤을 뿐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치극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미국 국민들의 소비 행태를 바꾸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직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비를 전액 지원하고 카풀을 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9>